"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 멈춰야"

시도지사협, 미얀마 시민 용기에 무한 지지 · 연대 뜻 전해

"민주주의 바라는 시민들과 국제사회 요구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한 미얀마 시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들까지 군부의 총탄에 희생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과 유혈진압을 강하게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뜻을 밝혀, 국내외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성명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적극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민들은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결국 승리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당당히 증명하고 있다"며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주요인사를 구금하고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30일 현재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당하는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지금 당장 민간인 학살 중단하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북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관 관계자들이 1일 전북도청 앞에서 '미얀마 쿠데타 세력 민간인 학살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왼쪽) 또한,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기리는 추모식과 병행했다.

1일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 일행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 쓸 수 있도록"

민주 김윤덕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국회의원이 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득표활동을 해오던 김윤덕 의원은 이날 광진구 아차산역 일원에서 합동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대표에 이어 무대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면서 "다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화가 난다고,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시장직을 시작도 전에 갈라치기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 공정과 상생을 위협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가족센터 설립, 공론화해야"

최영심 도의원

전주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가족센터' 건립에 시민들과 소통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의원은 1일 "기존 시설 부지를 증축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전주시는 무리한 추진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는 시민의 이용편이성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시가 보유한 토지에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곳은 새롭게 조성된 시가지로 조성된 곳"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존 센터가 설치된 도심지역은 빠른 쇠퇴의 길로 떨어져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한옥기술 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모색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북대 고창캠퍼스 방문 "한옥의 세계화 추진 노력에 감동"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일 한옥기술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한옥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옥건축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생산공정 시설을 둘러보고자 마련했다.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2010년 고창캠퍼스에 개소한 이래 12년째 운영 중인 한옥 분야 기술인력 양성 선도기관이다.

한옥건축 표준적인 과정을 가르치며, 첨단설계 장비까지 갖춘 전국에 몇 안 되는 전문기관이다.

설계인력과 기능인력 등 이곳에서 그간 배출한 한옥 관련 전문인력이 1,500명에 이른다.

특히, 연간 몇 명 선발하지 않는 문화재 실측사와 보수교육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인력양성과 더불어 한옥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작년 10월 22일 알제리 현지법인인 PYRAMIDE와 협약식을 가진 후, 현재 치목(목재를 깎고 다듬어 재목으로 만드는 일)을 끝내고 선적을 하기 위해 선적부두에 대기 중에 있다.

또, 작년 12월 18일에는 베트남 퀴논시에 한옥단지를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일 한옥기술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을 방문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이 사업은 베트남 퀴논시에 한옥 정자, 어린이집, 한옥 주민센터, 한국정원을 건축하는 데 약 10여 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 라스베가스에 한옥건축, LA에 한옥단지 구축 등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해경 단장은 "앞으로도 건축문화재의 보호와 우리 고장의 한옥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옥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옥사업단은 고창군의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집 수선을 교육과 접목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교육은 목공, 미장, 도장, 도배, 타일 등 다양한 분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친 후 고창군에서 추천을 받아 그 집을 수선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생들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새로운 교육모델로 추천되고 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옥건축 인력양성과 한옥의 세계화를 묵묵히 추진해 가는 사업단의 노력과 성과에 감동받았다"며 "특히 지역주민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노후주택 집수선을 융합한 교육모델은 지역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이틀간 김제시의원 보궐 사전투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과 3일 이틀간 김제시나선거구 지역(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4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 하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로 이송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회계연도 결산검사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섬길 의원을 위촉하고 오는 9일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일 결산검사 위원에 정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검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결산검사 위원은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전주시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정섬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전주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 도당 농어민위원회, 식량산업 발전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장용수)와 함께,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에서 추진하는 현황 소개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이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상민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은 "식량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는 무기와 비교될 정도로 식량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순기능과 식량산업의 현실화와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 농가 소득 제고에도 많은 역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장수용 회장은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강용구 도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지방자치특보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 특보로 임명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역할"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고용 증대 중기 사회보험료 과세특례 연장

민주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해당 특례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위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3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0년 전체 조세지출액의 5.2%로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가 폐지된다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 노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그간 고용을 줄이거나 동결해 왔던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구인 익산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두루 듣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